



공무원연금 개약을 당장 멈춰라! 공적연금 전반을 지키는 더 큰 투쟁의 촉매가 되자

지난 17일 안전행정부에 이어 28일 새누리당도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연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하후상박'을 강조한다. 그러나 연금의 불평등은 사실 하위직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 임금불평등의 연장선에 있다. 공무원연금의 재분배 기능을 강화할 필요도 있지만, 삭감을 전제로 한 개약에 이 논의를 끌어들이는 것은 꿈수에 불과하다.

잘못된 대립구도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편하려는 근거는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다. 그러나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은 성격이 달라 단순비교가 불가능하다. 공무원연금은 후불임금 성격

도 가지고 있고, 퇴직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성격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국민연금의 보장성을 대폭 축소시켜 노동자들의 노후를 파괴했다. 현재 한국의 1인당 월 평균 국민연금 수급액은 약 32만원으로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기초연금과 합쳐도 평균 24%에 불과하다. 부실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로 인해 노인빈곤율은 40%가 넘어서 OECD 국가 중 1위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지 않는 것은 정부인데, 그 불만을 공무원에 대한 공격으로 돌리고 있다.

공적연금 개약=사적연금 활성화

정부는 공무원연금의 적자로 인한 재

정부담을 개편의 근거로 내세운다. 그러나 정부는 공무원연금을 줄이는 한편 퇴직수당을 민간의 퇴직금 수준으로 올려 민간의 퇴직연금에 해당하는 퇴직수당연금으로 퇴직 공무원에게 분할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개편은 결국 민간퇴직연금을 확대해 사적연금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는 결과를 만들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약은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정부의 일관된 기초와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연금개혁'을 주장하는 이들은 고령화로 인한 지출증가를 보장수준의 축소와 연금의 금융화, 사적연금 활성화로 대응하려고 한다. 이 방식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사학연금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적연금은 노동자의 노후를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이다. 또한 노후를 위한 저축을 금융자본의 이윤 창출의 도

구로 만들고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에 종속시킨다.

공적연금을 지키는 투쟁을 시작하자

정부와 여당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은 근거도 논의방식도 잘못된 공적연금 개약이다. 이러한 정부의 공적연금 개약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정부는 분할되어있는 공적연금 제도를 시기를 달리해서 개약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 정부가 2009년에 이어 일방적으로 공무원연금 개약을 추진하는 것은 2007년 국민연금 개약을 제대로 막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공무원 노동자가 앞장서서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약을 저지하고, 분할된 채 약화되어가는 공적연금을 바로 세우기 위한 공동의 실천을 만들어 나가자!

판교 환풍구 사고, 개인 탓이 아니다



10월 17일에 발생한 판교테크노밸리 환풍구 추락사고로 16명이 사망하고 11명이 부상을 당했다.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환풍구가 죽음의 낭떠러지가 되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기 충분했다.

또 드러난 부실 안전 대책

첫 번째로 지목되는 사고의 원인은 환풍구의 부실한 안전기준이다. 1제곱미터 당 100킬로그램의 무게를 견디도록 되어있는 기준으로는 사고를 막을 수 없었다. 환풍구 둘레 안전펜스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환풍구 높이도 문제다. 해외 사례처럼 다중이용시설이나 거리 등에는 높이를 아예 5m 이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장의 안전대책도 문제였다. 천여 명이 모이는 행사임에도 안전통제 요원이 없었고, 사전에 소방서 등에 의한 시설안전 점검도 되지 않았다.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규제가 완화된 것도 그 배경이다. 안전관리 규정을 최대 관람객 3000명 이상의 지역축제에만 적용하도록 바꿔 이번 행사에는 안전요원 배치나 안전통제선 설치 등이 강제될 수 없었다.

근시안적 발상들

이번 사고에 대해 환풍구에 올라간 개인을 비난하는 인터넷 댓글이 난무하고, 보수언론은 판교 사고 유가족들이 빠르게 협상한 것을 두고 성숙한 자세라며 세월호 유가족이 배워야 한다는 등 망발을 일삼았다. 이 두 반응은 공통적으로 사고의 구조적 원인을 외면하고 개인의 책임과 보상문제로 관심을 돌려 문제의 총체적 해결을 가로막는 근시안적 발상에서 비롯한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 전체가 안전하게 바뀌어야 한다고 바랄 뿐이다. 보수언론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지위를 깎아내려 이러한 요구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길에 역행하는 것이다.

또다른 사고를 막으려면

우리는 반복되는 사고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문제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회 전반에서 시민들의 끈질긴 문제제기와 안전에 대한 권리 요구가 강화되어야 또다른 사고를 막을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 돌아본 국내외 대형사고의 역사와 교훈!

대형사고는 어떻게 반복되는가

박상은 지음 | 사회운동 출판사

가격: 6,500원

우리가 세월호를 기억하는 방식은 삼풍백화점과 다를 수 있을까? 이것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일에 대한 질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세월호를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둘러싼 힘겨운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 들어가는 글 중에서

"한국사회에서 다시금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길 바란다면 필독해야 할 책", "국내외 여러 참사들을 비교 분석하고, 세월호 참사의 구조적 원인들을 집요하게 분석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필독해야 할 책!"- 알라딘 100자평 중에서

생명과 안전을 위한 국민대회

11월 1일(토) 오후4시 청계광장

세월호 참사 200일 범국민 추모대회

11월 1일(토) 오후5시 청계광장

로봇수술, 줄기세포치료... 생명과 안전 팔아먹는 규제완화

올해 국정감사에서 신의료기술 평가에 대한 규제 완화가 화제가 되었다. 그런데 신의료기술은 고가이기 때문에 현재 병원에서 이윤 창출의 도구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검증 과정 없이 도입되는 경우 많은 부작용이 발생한다.

위험한 로봇수술 부추기는 병원

대표적인 사례가 로봇수술이다. 얼마 전 보라매 병원에서 로봇수술을 시행할

때마다 교수들에게 추가 수당을 지급해 논란이 일었다. 로봇수술은 아직까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기존 수술법보다 장점이 없는데 비해 가격만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이다.

이런 병원의 탐욕적인 의료 장사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지금의 박근혜 정부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로봇수술에 건강보험을 부분 적용해 보다 많은 환자들이 수술을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기기와 병원은 돈을 벌겠지만 더 많은 환자들이 비싸고 안전하지 못한 수술

을 받게 된다.

제약·의료자본 위한 규제완화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규제 완화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의료민영화 정책 중 하나다.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신의료기술의 평가 과정을 대폭 축소하는 안을, 6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는 줄기세포치료제의 임상시험 과정 중 일부를 생략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의 몇몇 연예인 사망사고

에서 보듯이 의료기술은 무엇보다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줄기세포치료제 역시 이스라엘, 독일 등에서 암을 발생시킨 사례가 있는 위험한 신약이다.

규제완화 철회하라

이런 상황에서 안전성 검증 절차를 대폭 축소한다면 환자들은 가난해질 뿐만 아니라,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신의료기술과 신약에 대한 규제완화 정책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